

ISSN 2733-8258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02
2020. 09. 03

www.nafi.re.kr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0. 09. 03

Vol. 02

ISSN	2733-8258
발행일	2020년 09월 03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연구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박성원

- I. 선호미래 도출 과정
- II. 4가지 선호미래 선택지
- III. 이대로 간다면...2050년 미래
- IV.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
- V. 선호미래가 실현되면...
- VI. 대안과 한계

참고문헌

2020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민서는 2050년 서른살이 된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때에 세상에 나온 민서는 어떤 미래에서 살고 싶을까.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11월 서울, 대전, 부산에서 2050년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들은 오가기 편한 숙의토론장에 모여 5시간 동안 자신과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보존분배사회’라는 선호미래유형을 최다 선택했다. 65명의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존분배사회가 선호미래로 선택되었다.

보존분배사회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적 성장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를 말한다. 이 미래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은 인류 공동의 난제인 지구 온난화에 모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도 겪고 있지만, 수시로 인류를 괴롭힐 세계적 감염병에 생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등장, 차별금지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허용하는 사회적 제도와 법,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인공지능기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자족도시의 개발 등도 선호미래상에 반영되었다.

● 선호미래를 위한 3대 방향

- ▶ [개인, 공동체] 개개인의 미래기획과 추진을 돕는 공동체 형성
- ▶ [정부, 국가] 경제적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 목표의 전환
- ▶ [국제관계] 국내외 연대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선호미래를 위한 7대 전략

- ▶ [환경] 2050년 1.5도씨 상승에 멈추는 국제적 리더십 발휘
- ▶ [보건] Disease X(다양한 세계적 감염병) 방어 체계 선도
- ▶ [주거] 도농간 공평한 주거환경과 생태·자족도시 실현
- ▶ [노동]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선택하는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 [기술]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작업환경 마련
- ▶ [사회] 혐오 처벌, 차별금지법으로 사회적 결속 강화
- ▶ [문화] 다양한 가족 파트너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

I. 선호미래 도출 과정

미래는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로 구별된다. 가능미래는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맞이할 미래다. 선호미래는 가능성은 작더라도 현재세대가 살고 싶은 미래를 말한다. 선호미래는 통상 중장기적 시계(視界)로 예측되기 때문에 2050년 서른살이 될 민서가 대변하는 미래세대까지 포함해 살고 싶은 미래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주로 가능미래를 탐색하고 대응의 전략을 마련했다. 선진국의 궤적을 따라가는 전략을 실행하다보니 선호미래는 국가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 추격 전략의 효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우리 사회는 지향할 목적지가 불확실해져 표류하고 있다. 국가가 추구할 미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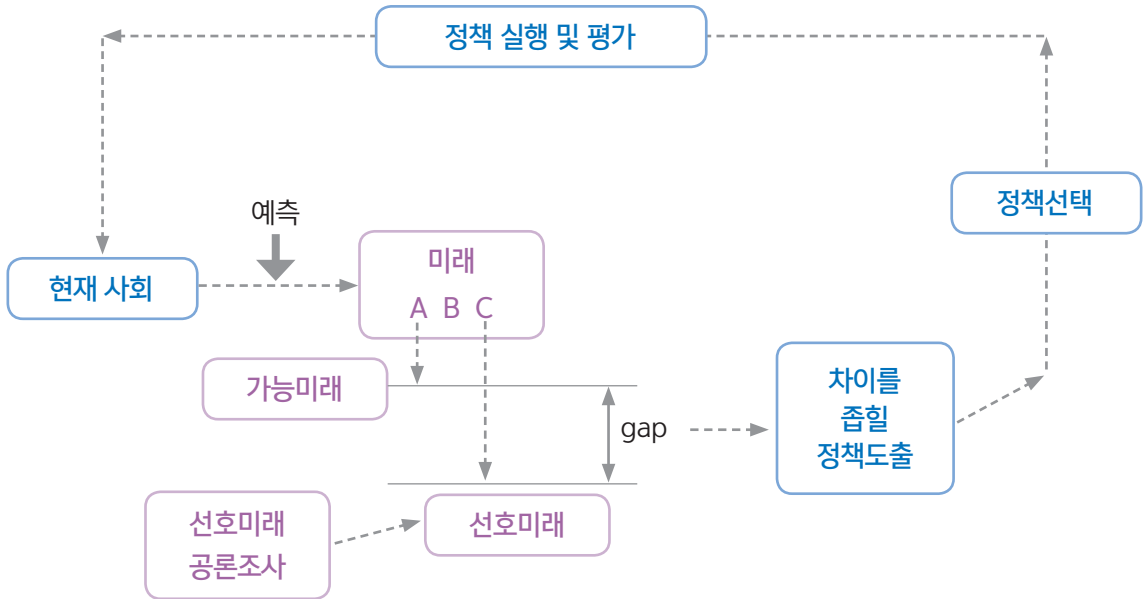
● 불분명한 선호미래로 국가 조타수 부재

선호미래가 불분명하면 다양한 세계사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다양한 변화에서 기회와 응전, 회피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구글의 알파고 프로그램이 이세돌 9단을 이긴 세기적 사건이 우리사회에 순풍(기회)일지, 역풍(위기)일지를 판단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지, 선호미래가 있어야 한다.

[그림]은 선호미래의 도출 및 실현의 과정을 나타낸다. 통상 한 사회가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가능미래는 3~4개로 압축된다. 이 미래들을 놓고 숙의토론을 거쳐 국민이 살고 싶은 미래를 선택한다. 이대로 간다면 맞이할 가능미래와 국민이 바라는 선호미래에 차이가 발견된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이 도출되고, 당대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실행된다.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면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 현재사회가 선호미래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이 바라는 선호미래상을 찾기 위해 숙의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2019년 11월 서울, 대전, 부산에서 선호미래를 논의할 시민들을 만났다.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들을 초청해 5시간이 넘도록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지 논의했다(참여자 모집 및 숙의토론의 상세한 과정은 박성원 외(2019)를 참조). 이들은 숙의토론장에 오기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가치와 예상되는 미래 이슈를 선택하고, 4가지 선호미래 시나리오를 읽는 등 선행학습이 된 참가자들이었다.

[그림 1] 선호미래 도출 및 실현의 과정



출처: 박성원 외, 2019, 일부 수정

해외 선호미래 도출 사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는 유럽 시민의 해(the European Year of Citizens)를 기념하면서 시민들에게 유럽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의 모든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시민들과 미래에 대한 대화에 나서도록 요청됐다. 2015년 53개의 시민 대화가 시작됐고, 2016년 73개, 2017년 317개, 2018년 818개, 2019년 1200개의 시민대화가 시행되었다. 이 기회로 유럽시민 26만명이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대화에 참여하고 140만명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유럽 미래를 위한 대화에 EU 시민 26만명 참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9월 유럽의회 정상들을 초청, 유럽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협의회를 발족하자고 제안했으며, 2018년 27개국 중 26개국의 동의를 얻어

시민협의회를 시작했다. 2018년10월까지 유럽연합국 대부분에서 시민협의회가 진행됐고, 프랑스에서만 1100회, 유럽연합 전체로 1700회의 협의회가 열렸다(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참조).

2016년부터 시작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는 각 지역사회 시민들이 유럽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로 이어졌고, 117개 지역과 182개 도시에서 210개의 지역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들의 의견은 2018년10월 유럽의 미래 프로젝트에 채택되었다. 유럽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가 2020년 유럽의 미래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이들이 어떤 미래 사회를 원하는지 묻는 ‘우리 싱가포르 대화(Our Singapore Conversation)’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3년 초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은 4만7천여명, 660개의 논의 주제별로 시민들은 살고 싶은 2030년 미래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정부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참여자의 인구학적 균형을 맞췄고, 오프라인 만남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선호미래 실현에도 기여

싱가포르의 시민 참여 미래예측 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진화를 거듭해 지금은 SGFuture(싱가포르 미래)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문화와 공동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시민이 함께 SGFuture를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5년11월부터 2016년7월까지 진행한 시민참여 미래준비 활동을 보면 8천300여명의 시민이 121개의 논의 주제를 만들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구상했다.

이들은 다양한 선호미래상을 제시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상을 실현하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격려한다. 누구든 선호미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고, 공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가예술위원회, 국가문화유산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기금(MCCY’s Our Singapore Fund)은 만18세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이면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실행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림 2] 2050년 선호미래 국민속의토론 현장



출처: 박성원 외, 2019

II. 4가지 미래사회 선택지

국민이 바라는 미래는 다양하다. 이해관계, 주거와 작업 환경, 선호 가치,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 선호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선호가치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인식, 진단, 예측, 비전은 가치판단과 떨어질 수 없다(강정인 외, 2019).

우리는 한국인의 선호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요 가치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1월 전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정영훈 외, 2019). 이 조사는 사회, 경제,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문화, 정치 분야에서 미래에 나타날 주요 정책을 제시한 뒤, 국민의 선호를 물어본 것이었다.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분석하면서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변화와 안정, ▶미래지향과 현재지향,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연대 등 3가지 대립되는 가치축에 따라 국민의 선호가 나뉘는 것을 발견했다. 3가지 가치축을 3차원으로 교차시키면 8가지의 미래상이 도출된다. 우리는 국민에게 물어본 미래 정책들을 8가지 미래상에 대입해 가치에 따라 정책적 특징이 잘 구별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변화는 미래지향과 안정은 현재지향과 한쌍처럼 붙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에 따라 미래중심(도전과 변화지향)과 현재중심(안정과 현행유지), 개인 자유와 공동체 연대 등 2개의 축으로 줄여 4가지 미래가 국민이 바라는 다양한 미래상을 반영하도록 했다(표1 참조). 2개 축을 교차시켜 도출한 4가지 미래는 **도약성장사회**(시간이 걸려도 세계 1위 목표), **안정성장사회**(지금 생존을 위한 안정성장), **보존분배사회**(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의 보존), **현존분배사회**(현재세대를 위한 자원분배) 등이다.

4가지의 미래가 각기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도록 우리는 가치와 정책적 방향성을 연결했다. 예컨대, 개인자유는 성장 중심, 중부담(세금) 중복지, 민간 중심, 절차적 공정성 중시와 연결했다. 공동체 연대는 분배 중심, 고부담(세금) 고복지, 정부 중심, 결과적 형평성 중시와 연결되었다. 미래중심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의 보존, 과학기술의 적극적 개발, 신재생에너지 중심, 빠른 변화 추구, 도전 중시와 연결했다. 반면, 현재중심은 현재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이용, 과학기술의 안정적 개발,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의 최대한 활용, 완만한 변화, 안정 중시와 연결했다. 이런 방법으로 4가지 선호미래별 10가지 정책적 방향을 정립할 수 있었다(표2 참조).

[표 1] 2가지 가치축이 교차한 4가지 미래사회 선택지

	미래중심 (도전과 변화 지향)	현재중심 (안정과 현행 유지)
개인 자유 (성장과 경쟁)	도약성장사회 (시간이 걸려도 세계 1위 목표)	안정성장사회 (지금 생존을 위한 안정성장)
공동체 연대 (분배와 협력)	보존분배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	현존분배사회 (현재세대를 위한 자원분배)

[표 2] 4가지 선호미래별 10대 구성 요인

2050년 미래 사회		도약성장 사회	안정성장 사회	보존분배 사회	현존분배 사회
개인 대 공동체	자유/연대	개인 자유 중시	개인 자유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성장/분배	성장 중심	성장 중심	분배 중심	분배 중심
	세금/복지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고부담 고복지
	정부/민간	민간 중심	민간 중심	정부 중심	정부 중심
	공정/형평	절차적 공정성 중시	절차적 공정성 중시	결과적 형평성 중시	결과적 형평성 중시
도전미래 중심 대 안정현재 중심	환경/자원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과학기술	적극적 활용	안정적 활용	적극적 활용	안정적 활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에너지 중심	신재생 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에너지 중심
	사회변화	빠른 변화 추구	완만한 변화 추구	빠른 변화 추구	완만한 변화 추구
	도전/안정	도전/변화 추구	안정/현행 유지	도전/변화 추구	안정/현행 유지

Ⅲ. 이대로 간다면...2050년 한국사회

502명의 국민 참여단에게 우리 사회가 현재대로 간다면 2050년 어느 미래에 도달할 것 같은지 물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로 안정성장사회가 꼽혔다(43.4%). 이 미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점진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다. 급작스런 변화는 현재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원(원자력과 석유)을 최대한 활용한다. 국민 참여단은 왜 이런 미래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들어보았다.

“1인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기 때문.” (강원도, 남성, 30대)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고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 (경기도, 여성, 30대)

“곤충, 식물, 척추동물의 서식지가 감소되며 세계 기온은 3도 상승 가능” (부산, 여성, 60대)

국민 참여단은 안정성장미래가 현재 대한민국과 가장 닮았으며,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주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외국인 이민자 증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저출산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이 미래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안정성장미래는 국민 참여단이 가장 피하고 싶은 미래로도 꼽혔다(34.9%). 이 미래를 회피하고 싶다는 참여자는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세대를 불문했다. 회피미래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도시 중심으로만 발전하고 지방 소외는 가속화.” (인천, 여성, 50대)

“기후변화, 환경문제를 풀지않는 안정적 성장은 무의미.” (경기, 여성, 20대)

“나만 알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쁜 사회일 듯.” (서울, 남성, 20대)

“안정지향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개인의 자유 중시로 사회가 분열될 것.” (전남, 남성, 60대)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치안과 일자리 문제 심각.” (전북, 여성, 30대)

국민참여단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지방도시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걱정,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증가로 범죄 증가 우려, 중소도시의 쇠퇴와 불평등 심화, 지나친 경쟁주의 등으로 안정성장의 미래를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맞이하게 될 미래가 회피의 1순위로 꼽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IV. 2050년 국민이 바라는 미래

국민 참여단이 꼽은 선호미래 1위는 보존분배사회다(43%). 보존분배사회는 현재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적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다. 이 미래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은 인류 공동의 난제인 지구 온난화에 모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도 겪고 있지만, 수시로 인류를 괴롭힐 세계적 감염병에 생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 참여단이 왜 이 미래를 지지하는지 들어보았다.

“가족의 개념이 유연하게 나타난 미래여서 좋았다.” (경북, 여성, 20대)

“계층간의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미래여서.” (대구, 남성, 60대)

“탄소제로의 미래가 꼭 와야 한다.” (경기, 남성, 30대)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존은 내가 꿈꾸는 사회.” (인천, 여성, 40대)

개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등장, 차별금지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허용하는 사회적 제도와 법,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인공지능기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생태·자족도시의 개발 등도 선호미래상에 반영되었다.

이 미래의 지지자들은 특히 20대가 많았다. 이들은 유연한 가족 구성, 인간중심적 가치관의 구현, 발전과 보존의 적절한 균형, 다원화된 사회에서 차별 금지 등을 사회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원하는 유연한 가족의 구성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인데,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20대가 가족구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6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선호미래 조사에서도 보존분배미래가 1순위 선호미래로 선택되었다(63.1%). 전문가들은 기존의 성장담론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다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다문화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통합성, 공동체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칠 중대한 외부 변화에 대응하는 내적인 힘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배의 강화, 삶의 질 향상은 새로운 사회적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 선호미래가 실현되면...

● 자연·주거 환경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050년은 1.5도씨 상승에 멈춰져 있다. 한국은 탄소제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국민의 수용성, 참여 확대 등에서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었다. 또한, 2040년 재생에너지 50%(발전량 대비), 석탄발전소 쇠퇴, 분산에너지 확산, 온라인 근무 확대 덕분이었다.

1.5도씨 상승에 멈추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노력이 결집되면서 주거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전기화, 디지털화가 추진되었다. 선도적인 지역 사회는 탄소제로를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송과 교통수단은 전기차로 바뀌나갔다.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기업을 운영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들을 지역사회에 유치했으며, 농어촌은 이런 기업들을 위해 스마트시티로 변모했다.

2050년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감염병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Disease X(세계적 유행병)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앞서갈뿐 아니라 특히, 주거와 일터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세계적 감염병에 대응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집이나 카페, 공원 등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연결해 일하고, 기업의 사무실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분산 사무실을 도입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한다.

● 일터·산업환경

2050년 미래는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많은 받는 고부담 고복지 사회다. 이 미래를 지향했던 초기에 국민의 저항이 많았지만, 정부의 세금 지출에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이 복지수준의 향상을 체감하자 생각이 바뀌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일 선택이라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결과적 형평성, 사회적 신뢰에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실현한 덕분이다. 또한, 융합과 연결의 시대에 노동자 공용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일하든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기업환경에 적응하도록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한다. 기업인들도 자금을 출연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조건에서도 격차가 거의 없다.

수많은 인공지능기술이 일상 생활뿐 아니라 일터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면서 적지 않은 직업이 사라졌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사회는 자동화 추세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면서 인간중심의 자동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인간의 기술 의존성을 줄이고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목표다.

● 가치·정치 제도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세력이 모이면서 이를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이 등장했다. 다문화당, 지역당, 노인당, 청년당, 여성당, 전자인간 행복당 등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정당의 등장으로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 시민들간에 정치적 대화가 증가했다. 정당이 서로 협력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많다.

탈중앙화, 분권화 추세와 더불어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지역 밀착 커뮤니티도 대거 나타났다. 에너지자립 공동체, 다문화예술 공동체, 고양이 장수마을, 생태보존 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공익을 도모하는 협력이 강화되었다.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의 기준과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또한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차별이 줄어들자 다양한 가족 구성의 자유, 성전환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

● 대인·가족관계

2050년에는 혈연이나 입양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 집에서 6~7명씩 모여살면서 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로봇이나 반려동물과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미래에서 가족은 친밀하지만 관계가 느슨하고, 서로 부담이 적은 사이를 말한다. 정서적으로 가깝지만 서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공동육아와 노인돌봄타운의 증가도 한몫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 함께 살지 않는 정신적 가족(spiritual partnership)도 많다. 더 나아가 세상을 떠난 가족과의 만남도 가능하다. 살아있을 때 남겨놓았던 고인의 여러 데이터를 모아 가상현실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으로 묶였다가 다시 남으로 해체되는 것이 잦아지자 이런 현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VI. 대안과 한계

우리는 선호미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각분야별 전문가들과 보존분배사회의 의미, 실현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이 왜 보존분배사회를 선호미래로 선택했는지, 선택의 이면에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이를 실현하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토론했다. 이들 전문가는 지난해 선호미래 조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를 다시 면밀하게 분석해 실천의 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선호미래가 실현되려면 3대 사회적 방향 전환과 7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는 흥미롭게도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가미래전략 Insight 1호에서 20대 국회 정책 보좌진이 제안한 11대 국가 개혁과제와 상당부분 겹친다(김유빈, 2020 참조). 예컨대, 친환경 에너지사회, 스마트 정주여건, 인간중심 가치구현, 다양성 존중의 시대 등이 비슷하다.

● 선호미래를 위한 3대 방향 전환

- ▶ [개인, 공동체] 개개인의 미래기획과 추진을 돕는 공동체 형성
- ▶ [정부, 국가] 경제적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 목표의 전환
- ▶ [국제관계] 국내외 연대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선호미래를 위한 7대 전략

- ▶ [환경] 2050년 1.5도씨 상승에 멈추는 국제적 리더십 발휘
- ▶ [보건] Disease X(세계적 감염병) 방어 체계 선도
- ▶ [주거] 도농간 공평한 주거환경과 생태·자족도시 구축
- ▶ [노동]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선택하는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 [기술]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동화 작업환경 마련
- ▶ [사회] 혐오 처벌, 차별금지법으로 사회적 결속 강화
- ▶ [문화] 다양한 가족 파트너 인정하는 열린 사회

선호미래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띤다. 이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실현하려면 매우 치밀하면서도 대대적인 사회적 설득과 지난한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를 지지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 시민조직, 정당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2050년의 시각이 아닌, 지금의 현실적 조건에서만 선호미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1960년대 경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49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고 했을 때, 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은 많아야 500달러”로 전망했다(김연숙, 2012). 1960년대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다. 그 때의 현실적 조건에 갇힌 채 미래를 보면 지금의 발전된 한국의 모습이 상상될 리 없다.

장기적 선호미래를 상상할 때는 실현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하다. 만일, 1960년대 한국의 빈약한 경제적 환경만 보고 경제선진국이 되려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지 모른다.

올해 태어나 2050년 서른살이 되는 민서는 어떤 미래에 살고 있을까.

참고문헌

- 강정인 외. (2019).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김연숙. (2012년12월20일자). 60년대 대학생들, “2049년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 연합뉴스
- 김유빈. (20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01.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19). 한국인의 선호미래 조사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정영훈 외. (2019).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국회미래연구원
-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From Local to European: Putting Citizens at the Centre of the EU agenda.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